

민사소송에서의 항소이유서

안녕하세요. 남현 변호사입니다.

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민사 항소심 절차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. 기존에는 항소이유를 적은 준비서면 제출 기한에 대한 강제성이 약해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, 위 개정으로 '**항소이유서 제출의무**' 제도가 도입되면서 절차적 엄격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.

오늘은 구체적인 법령 내용을 중심으로, 민사소송에서의 항소이유서 제도의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.

1.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 및 기한 (민사소송법 제 402 조의 2)

개정법의 가장 큰 변화는 형사소송과 유사하게 민사소송에서도 법정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.

① 제출 기한의 기산점과 기간 (제 1 항)

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'소송기록 접수 통지'를 받은 날부터 40 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이는 기존에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법률상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여,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.

② 제출 기간의 연장 (제 2 항)

40 일이라는 기간이 부족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, 법은 예외적인 연장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.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, 결정으로 1 회에 한하여 제출 기간을 1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※주의 사항

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당사자의 '신청'이 있어야 하고, 법원의 연장 결정이 없으면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. 또한 **횟수(1 회)와 기간(1 개월)이 법률로 엄격히 제한**되어 있으므로, 실무상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2. 부제출에 따른 불이익: 항소각하 결정 (민사소송법 제 402 조의 3)

항소이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가 매우 강력해졌습니다. 변론을 열지 않고 곧바로 항소를 종결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.

① 원칙적 각하 (제 1 항 본문)

항소인이 위 제출 기간(연장된 기간 포함)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,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. 이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기속 사항("각하하여야 한다")으로 규정되어 있어, 기한 도과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.

※판결례

실제로 부산지방법원 등에서는 항소인이 법정 기간 내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의 타당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항소를 각하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(부산지방법원 2025. 10. 28. 자 2025나43319 결정).

② 예외 사유 (제 1 항 단서)

다만,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항소를 각하하지 않습니다.

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: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(소의 이익, 당사자 적격 등)가 있는 때.

항소장에 기재된 경우: 항소장 자체에 이미 항소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때.

③ 불복 절차 (제 2 항)

항소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3. 항소이유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(민사소송규칙 제 126 조의 2)

개정 민사소송규칙은 항소이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여, 단순히 "불복한다"라는 식의 추상적인 기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

① 항소이유의 유형화 (제 1 항)

항소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명시적으로 적어야 합니다.

- **절차적 위법:**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 규정에 어긋나거나 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
- **사실오인 및 법리오해:**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 때
- **이유 불비 및 모순:**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.
- **기타 사유:** 그 밖에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.

② 구체적 특정 의무 (제 2 항)

항소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 1 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. 이는 쟁점을 명확히 하여 심리를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(단,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)

③ 실기한 주장의 각하 (제 4 항)

만약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기간을 넘겨서 뒤늦게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하는 경우, 법원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. 이는 ‘항소이유서 제출 기간’이 실질적인 쟁점 정리 기한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입니다.

4.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 및 심리 절차 (민사소송규칙 제 126 조의 3)

항소인뿐만 아니라 **피항소인에게도 신속한 대응 의무가 부과**되며,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집중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. 즉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이를 피항소인에게 송달하며, 재판장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5. 요약 및 실무 제언

이번 민사소송법 및 규칙 개정의 핵심은 ‘40 일’이라는 엄격한 법정 기간의 도입과 ‘구체적 이유 기재’의 강제입니다.

- **관리의 중요성:**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는 즉시 40일의 기한을 계산하고, 필요시 즉각 연장 신청(1 회, 1개월)을 해야 합니다. 이를 놓치면 변론 한번 해보지 못하고 패소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.
- **서면 작성의 구체성:** 항소이유서는 단순한 의사 표시가 아니라, 규칙 제126조의2가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특히 제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부적법한 항소이유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.

지난 3 월에 새로 도입된 항소이유서 제도는 민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절차적 장치입니다. 변경된 법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송 수행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. Copyright ©2026 SEUM Law.

남현 변호사

Partner

hyun.nam@seumlaw.com